

제35회 오키나와 국제반전집회 연설문 (2018.6.23.)

이시우

2016년 11월 한국에서 촛불혁명이 일어났습니다. 마침 러시아혁명 100주년이 되는 주간이었습니다. 혁명은 현상유지세력을 제압하고 현상변경을 시도하는 행위입니다. 현상변경으로서의 혁명은 무장과 폭력을 수반해왔습니다. 광화문광장의 군중은 청와대와 정부기관을 접수할 수 있는 규모를 훨씬 넘어섰습니다. 전국의 경찰력은 청와대에 집결해 있었기 때문에 청와대를 제외한 전국은 공권력공백상태가 되었습니다. 경찰력은 물론 군대가 동원되었어도 진압하기 힘든 규모였습니다. 과거 어떤 혁명의 규모도 뛰어넘는 압도적인 기세에 세계가 놀랐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폭력도 없이 일사분란한 질서가 유지되었고 선거로 정권이 교체되었습니다. 폭력혁명이 아닌 평화적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 세계가 다시 한 번 놀랐습니다.

북은 2017년 미국까지 닿을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세계전쟁의 문턱까지 끌고 갔습니다. 세계는 북이 놀라운 속도로 핵무장을 완성한 것에 놀랐습니다. 그러나 2018년 김정은은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에서 전격적으로 핵포기를 선언함으로써 또 한 번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남한의 촛불혁명은 평화적 현상변경이었습니다. 북한의 핵혁명 역시 평화적 현상변경이었습니다. 폭력과 전쟁을 통해서만 현상변경이 가능하다는 공격적 현실주의자들의 공식이 이로서 완전히 깨어졌습니다.

현상변경은 곧 관계의 변경입니다. 예를 들어 북핵이 미국에 위협이 된 것은 북미가 70년 넘게 적대관계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이스라엘의 핵을 문제 삼지 않는 것은 적대관계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관계가 변하면 사물의 성질도 변합니다. 나트륨과 염소는 모두 독극물입니다. 그러나 이 두 물질이 결합하면 인간에게 돌도 없이 유용한 소금이 됩니다. 관계사 사물의 속성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적대관계가 해소되면 핵무기는 불필요해집니다. 북은 핵을 포기하기 위해 핵을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핵보유가 목적이 아니었고 적대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핵이 필요했으 뿐이라고 합니다. 북이 추진해온 전략은 핵보유전략이 아닌 핵폐기전략이었던 것입니다. 놀라운 역설이 아닐 수 없습니다.

2017년 북은 가장 위험한 무기를 가장 위험한 수준까지 운용했습니다. 북의 전쟁의지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고 약소국인 북한에 관심도 두지 않던 미국이 전쟁을 실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서 북핵문제는 미국생존과 안보의 첫 번째 의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북핵문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기 위한 위장전쟁공세였습니다. 세상이 속았고 북한 국민과 당관료들까지 속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핵폐기전략이 극적이고 감동적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연출은 북의 통제능력이 고도화되어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통제되지 않으면 바늘도 무기가 될 수 있고 통제가 잘 된다면 총칼도 평화를 위해 쓰일 수 있습니다. 북의 핵혁명은 핵을 보유한 순간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핵을 포기한 순간 일어났습니다. 북은 아무런 보상요구도 없이 핵실험장을 폭파시키고 ICBM발사대를 철거했습니다. 억류된 미국인들을 돈 한 푼 요구하지 않고 송환시켜주었습니다. 트럼프가 그 선의에 감동했고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2017년 북이 '힘에 의한 강제'를 추구하는 것처럼 보였다면 2018년의 북한은 '선의에 의한 강제'가 가능함을 보여줍니다. 가라타니 고진의 '선의에 의한 증여'형식이 국제정치에서 실제로 실현된 것입니다.

북이 핵폐기를 실행함으로써 발생한 '선의에 의한 강제'는 이제는 미국의 체제변환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에 맞먹는 통 큰 결단을 내려 한미연합군사연

습을 중단했습니다. 군대는 전시에는 전쟁을, 평시에는 훈련을 위해 존재합니다. 즉 훈련하지 않는 군대는 존재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훈련중단은 미군의 운영적 군축입니다. 운영적 군축의 다음단계는 구조적군축입니다. 무장해제와 기지철수가 이에 해당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당장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이는 트럼프의 즉흥적인 발언이 아닙니다. 2016년 트럼프지지자였던 국제정치학자 미어세이머는 주둔전략(Onshore)에서 해양전략(Offshore)으로의 전환을 촉구하며 유럽과 페르시아만에서 미군을 철수할 것을 주장한바 있습니다. 이는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에도 적용가능한 논리였습니다. 당시엔 이론이었지만 이제 트럼프를 통해 수면위에 떠올랐습니다. 한반도의 분단체제와 일본의 샌프란시스코체제를 바꿀 기회의 문이 열렸습니다. 아베정부가 서둘러 일북회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를 싫어하는 미국언론과 마찬가지로 아베를 싫어하는 일본 언론도 아베에 대한 의심과 함께 북한에 대한 의심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의심'은 전쟁주의자들의 기본가정입니다. 그러나 현재 도래한 평화주의는 의심이 아닌 신뢰를 기본가정으로 합니다. 지금까지 문재인대통령과 트럼프대통령이 그러했듯이 일본도 '의심'을 '신뢰'로 바꾸는 용기와 지혜가 필요합니다. 북은 일본과 식민지때부터 숙적관계이고 지금도 적대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많은 일본국민은 '왜 우리가 북한에 위협이 되지'라고 의아해 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는 유엔사 후방기지가 8개 있습니다. 이중 오키나와에는 캠프 후탸마, 카데나, 화이트비치에서 매일 유엔기가 게양됩니다. 이들 기지는 북을 직접적인 적으로 상정하고 있는 주한미군사령관 겸 유엔사령관의 작전통제 아래 있으며, 일본정부와 아무런 사전협의 없이 한반도사태에 즉각 개입합니다. 이들 유엔사후방기지의 철폐를 위해서는 1951년 샌프란시스코조약과 함께 체결된 요시다-애치슨교환공문과 이에 기반한 일본-유엔사령부간 행정협정(SOFA)이 철폐되어야 합니다.

북미정상합의문과 남북의 판문점선언에는 올해 안에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유엔군사령부가 해체됩니다. 유엔사가 해체되면 90일이내에 기지에서 철수하게 됩니다. 주일미군 전체의 철수는 아니지만 유엔사에 의해 한반도 유사시에 자동 개입하는 구조는 사라진다는 점에서 주일미군의 존재근거를 와해시켜가는 사건이 될 것입니다. 북한은 체제내변환을 마무리하고 이 변화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일·미는 아직 체제내변환 준비가 안되어 있습니다. 판문점선언이후에도 한국정부는 주민들의 저항을 무릎쓰고 성주싸드기지의 확장공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싸드는 북한 핵미사일 때문에 들어온 것인데 북이 핵을 포기하는 마당에 싸드기지 공사를 확장하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 일입니다. 북핵폐기에 대해 북이 주한미군철수를 요구해 올 가능성이 있는데도 주한미군철수는 없다고 못박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직 미국이 결단하기 전까진 한국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이 됩니다. 일본도 핵문제로 열리는 북일회담에서 납치자 문제나 경제지원 같은 의제만을 앞세웁니다. 적대관계가 해소되면 풀릴 수 있는 의제를 앞에 둬으로써 회담개최를 불투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적대관계해소를 미국에게만 맡겨두면 굳이 남·북과 일·북이 따로 회담할 이유가 없습니다. 한·일의 결정범위가 미국의 결정범위 안에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랜세월 미국에 의해 규정된 결정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시민사회는 양국 정부가 더 크게 결단할수록 지지와 촉구를 동시에 보낼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의 핵개발 후 중·미수교과정에서 보인 일본의 대응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은 1971년 중·미비밀외교가 알려지자 곧바로 중공과 수교협상을 시작합니다. 미국과 중국의 접촉이 일본과 중국간의 국교정상화를 가능하게 한 배경을 만든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1972년 9월, 다나카 가쿠에이(田中角榮)수상이 취임한지 3개월도 안된 시점에서 서둘러 양국관계정상

화를 발표한 것은 일본의 독자적 결단이었습니다. 72년 일·중수교에 나서면서 일본이 제시한 선택지는 대만과 중공, 둘 다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1951년 샌프란시스코체제하에서 일본이 대만을 배신하고 중공에 양다리를 걸치는 것도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주은래는 그마저도 단호히 반대했습니다. 두 개의 중국정책은 중국이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일본은 차선에서 차악의 선택, 즉 대만을 버리고 중공과 손잡음으로서 샌프란시스코 체제를 대체하는 결단을 해야 했습니다. 일본은 결단했고 일·중수교가 성립되었습니다. 중국은 일본에 대한 선물로 전쟁배상금청구를 포기했습니다.

지금 문재인정부와 아베정부는 미국에 의해 규정된 결정범위 확대시키는 결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두 나라에 기회가 더 크게 열립니다. 마지막으로 트럼프가 북미회담에서 말한 명언을 양정부에게 들려드립니다. 전쟁은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러나 평화실현은 용기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다.